

세계화는 兩極化의 主犯인가?⁽¹⁾

李 永 燮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불거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현황, 원인 및 대응방안을 세계화와 관련해 살펴본다. 여러 자료에 기초해볼 때, 최근의 양극화 심화현상은 추세적인 것이 아니며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개선되어 오던 양극화 문제가 2003년 이후 다시 악화되는 경향으로 반전된 것이다. 또한 상류층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변함이 없는데 빈곤층이 확대되어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양극화 현상은 경기적 원인에 기인한 바가 가장 크지만 적하효과가 약화된 구조적 원인도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와 기술진보 등의 근본적 원인은 현재의 양극화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양극화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계화 요인보다 기술진보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쳐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극화에 대한 처방은 양극화의 원인과 결부지어 제시해야 한다. 우선 세계화와 기술진보 같은 메가트렌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승자와 패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자의 혜택이 패자에서 파급되는 적하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부문 간 연계효과를 높여야 한다. 동시에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인적자원 형성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序 論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兩極化가 세간의 화두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도 양극화 문제가 종종 제기되었는데, 수년 전에는 범국가적 테마로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도 양극화가 부분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문제임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홈페이지에 특집시리즈까지 연재했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사회, 산업, 국토, 정치 등 4개의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는 빈부격차, 교육격차, 임금격차, 산업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국토양극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정치양극화는 지역적 대결주의 등이라고

(1) 이 글은 2006년 6월 15~16일 개최된 국제경제학회 정책세미나(개방화의 경제적 파장과 경제정책)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발표되었던 것을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수정보완한 것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양극화는 결국 소득양극화로 귀결됩니다.”⁽²⁾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에 따른 국민분열, 성장동력 훼손, 경제시스템 붕괴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세계화를 들고 있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이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논리로 세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 세계화가 세계를 ‘20대 80의 사회’로 재편하는 이데올로기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황준성(2003)]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처방으로 “...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 반대 없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 운동은 현실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노방(2005)]는 반세계화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세계화는 양극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세계화에 기인한 양극화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의 문제를 세계화 추이 혹은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의 전반적인 추이와 무조건 연계시켜 논의하다보면 최근의 양극화의 실체, 원인 등에 대해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처방은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가 정말로 세계화에 기인한 것인지, 그리고 반세계화가 그에 대한 해법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극화와 세계화의 관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현재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황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둘째, 양극화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었는지를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셋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하더라도,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반세계화가 적절한 처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소 주의깊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양극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양극화와 세계화의 관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의 현황에 대해 데이터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전반적인 현황을 표 및 그림을

(2)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당시 청와대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강석훈(2006) 등을 참조할 것.

통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양극화의 다양한 원인을 설명한다. 세계화도 물론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세계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처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계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아울러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간단한 요약 및 몇 가지 논점을 환기시키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2. 兩極化와 世界化의 關係

2.1. 兩極化의 概念 및 影響

兩極化의 概念

양극화는 대내외 환경변화 등 충격에 의한 대응과정에서 경제적 성과가 양극단으로 분화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³⁾ 이러한 현상은 중간 계층이 약화되는 空洞化 現象(hollowing out)을 유발하게 되는데, 따라서 중간 계층의 감소현상을 양극화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양극화를 소득에 적용시키는 경우 상위층과 하위층의 비중이 커지고 중산층이 감소하면 소득양극화가 나타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양극화 개념을 산업에 적용하면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간의 산업양극화, 기업에 적용시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업양극화, 그리고 이념에 적용시키게 되면 좌파와 우파 간의 이념양극화 등이 나타나게 된다.

양극화 개념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것이 貧困化 문제이다. 빈곤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빈곤층은 소위 貧困線(poverty line) 이하의 소득을 얻는 계층의 사람들로 정의하는데, 빈곤선은 절대적 기준 및 상대적 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한다.⁽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주로 상대적 방식에 근거해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빈곤층이 확대되어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양극화가 진행되면 빈곤층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양극화가 빈곤층의 확대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우선 단순히 산술적인 측면에서 중산층이 확대됨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더라도 중상의 중산층 비중이 커지면 평균 혹은 중위소득의 일

(3) 장동구(2004)의 정의를 일부 수정함.

(4) 이준구·이창용(2005). 절대적 방식에는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 등이 있으며, 상대적 방식은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빈곤선을 추정한다.

정비율 이하의 비중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보다도 더욱 큰 오류가능성은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빈곤층이 확대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특히 국가 내에서의 양극화가 아니라 전 세계 차원에서의 양극화 문제를 논의할 때는 餓死(starvation)와 관련된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빈곤문제를 결부시키다보면 이러한 본질과 유리된 양극화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

兩極化의 影響

양극화 현상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심화 및 지속되면 어떤 형태로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려는 사회적인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안정성이 저해되고 불안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고용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전방위적인 양극화 속에 소득불균형이 확대됨에 따라, 설혹 기대 이상의 고성장을 실현한다 하더라도 경제성파에 항상 불만을 느끼는 근로빈곤계층이 점차 더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사회의 통합기반이 심각히 잠식되고 사회적 불안 요인이 증대할 위험성이 큼을 의미한다.

양극화 심화는 또한 성장잠재력을 감소시키고 성장동력을 소멸시킬 우려가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우리 사회에 내재된 다양한 갈등 요인(소득집단간, 지역간, 세대간)들이 사회의 전 계층·전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면서 사회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사회적 불안의 증대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장기적인 인적자원 투자의욕도 저하시켜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활력이 상실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양극화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심화되면, 이는 국민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산업간 및 기업간 격차는 소득·고용격차로 이어지고, 이러한 격차가 교육·인적자원·기술개발 투자기회의 혁신기반 격차로 이어져 다시 산업·기업간 격차로 연결되는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면 소득분배 악화 등 양극화가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고리에 빠질 수 있다. 양극화가 지속될 때 산업부문에서는 국내 선도대기업, 외국계 다국적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계속 약진하는 반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제조업체, 그리고 전통적 서비스업 및 건설업 내 다수의 영세업체들은 한계화 내지 도태되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다. 아울러 소득격차 및 이에 따른 교육·인적자원투자 기회의 격차가 지속되어, 노동의 세대내·세대간 이동성이 크게 저하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문 간 격차가 커지고 노동의 이동성이 저해되면 경제부문 간 연관관계가 단절되어 선도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경제전체에 파급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일부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더라도 경제 전체적으로는 회복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저소득층 및 빈곤층이 확대되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극화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불안정한 저성장과 각종 사회적 긴장의 분출로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成長과 分配의 惡循環 고리'가 고착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우리 경제의 '시스템 危機'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2.2. 世界化와 兩極化의 關係

세계화는 우리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세계화란 경제활동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가 심화되면 전 세계시장이 통합되어 가고 따라서 상품과 생산요소의 이동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거래 현황을 보면, 상품과 자본 측면에서는 상당한 정도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생산요소인 노동과 관련해서는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양극화는 심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다.⁽⁵⁾ 세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리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國家間 양극화이고 다른 하나는 國家內 양극화이다. 우선 전 세계 국가 간 양극화와 관련해, 세계화의 진전으로 무역이 확대되면 각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해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해 더욱 부유해지고 후진국들은 저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져 선진국과 후진국 간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세계화에 따른 자본이동의 확대도 국가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되면 각국 경제, 특히 후진국 경제는 외부요인에 취약하게 된다. 특히 단기차익을 노리는 핫머니들의 이동에 따라 금융기반이 취약한 후진국 경제는 붐-버스트 싸이클(boom-bust cycle)에 노출되어 훨씬 더 불안정하게 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는 심각하게 불황에 빠져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세계화가 국가 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논리도 국가 간 양극화 논리와 유사하다. 즉,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 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한 산업은 사양화될 수밖에

(5) 관련된 논의는 Atkinson(1999), Srinivasan and Bhagwati(1999), Hurrell and Woods(2000), Economist(2001), Lindert and Williamson(2001), Wade(2001), Sala-i-Martin(2002), Fisher(2003), Stiglitz(2003), Wan *et al.*(2004), 김준현(2005), 이강국(2004), 이정우(2005), 장상환(2005) 등을 참조할 것.

없으며, 사양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도산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실직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비교우위에 속한 산업과 사양산업 간 그리고 각 산업에 속한 노동자들 간에 산업 양극화 및 소득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게다가 FDI 등을 통한 자본이동도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킨다.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특히 비숙련노동자들은 범세계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만일 이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면 기업들은 임금이 보다 싼 지역으로 공장을 이동하거나 이동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며, 따라서 비숙련노동자들의 임금은 하향평준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이 속한 저소득계층과 기업경영자들이 속한 고소득계층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FDI뿐만 아니라 단기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도 국가 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기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경제를 봄-버스트 사이클에 노출시키는데, 이들이 갑작스럽게 빠져 나가게 되면 경제가 위축되어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실화된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시행되면 실업자가 속출하게 되고 따라서 많은 중산층이 하위층으로 혹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

그러나 세계화는 양극화에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세계화가 국가 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논리는 국제무역의 또 다른 동기인 規模의 經濟 效果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즉, 후진국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이를 소화시킬 시장이 협소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혁신적인 노력으로 상품을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아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어 후진국의 뒷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무역이 확대되면 후진국 기업들은 선진국 시장 혹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생산을 확대해 거대하고 지속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이 더욱 확대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현되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생산을 더욱 확장할 수 있고 해당국가의 경제규모 및 국내고용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제무역의 확대는 수출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수입을 통해서도 후진국의 성장을 촉진해 국가 간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수입을 통해 선진국의 기술이 체화된 자본재가 도입되면 학습효과를 통해 후진국의 생산성이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경쟁하게 되면 생존을 위해 질적 향상의 압력을 심하게 받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설비를 최적으로 유지하며, 국내외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생산물과 판매방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국내노동자들은 작업하는 가운데 학습효과를 얻게 되며 외국기업과 접촉하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산업경험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처럼 貿易을 통한 상호교류는 후진국들을 선진국들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자본재 및 기술의 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고 성장을 촉진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김인준·이영섭(2008)].

무역뿐만 아니라 資本의 교류도 국가 간 격차를 축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선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져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가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자금수요자의 조달비용을 낮추고 투자기회를 확대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후진국들은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못해 투자재원이 부족한데, 외국자본의 유입, 특히 FDI의 유입은 투자자금 수요를 충족시켜 후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세계화는 무역부문의 세계화와 마찬가지로 경쟁을 통해 후진국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즉,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국내금융시장과 외국금융시장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따라서 시장메카니즘의 역할을 강화시켜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더욱 높일 뿐만 아니라 첨단금융기술 및 경영기법 이전에 따라 금융시장의 잠재력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한편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기능이 제고되어 기업경영의 효율성 또한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제고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되어 선진국과의 격차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자본이동이 활발해지면 동태적 예산제약을 완화시키고 서로 다른 시점간 消費平滑化(intertemporal consumption smoothing)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후진국에서 국내의 협소한 수요기반을 일부나마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⁶⁾

3. 兩極化의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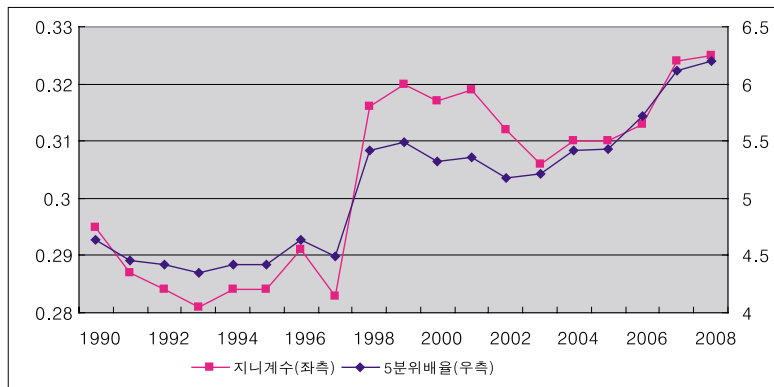
지금까지 간략하게 양극화의 개념과 세계화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세계화가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었는지를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양극화의 실태를 한 번 살펴보자.

(6) 후진국에서 금융시장의 저발전이 소비수요를 제약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Economist(2005)를 참조할 것.

3.1. 所得兩極化

양극화가 국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주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잘사는 층과 못사는 층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소득양극화로 대변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흔히 1990년 이후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 배율을 제시하였다.⁽⁷⁾

〈그림 1〉에 나타난 추이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첫째,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 동안에는 소득양극화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1990년 0.295에서 1997년 0.283으로 감소하였고, 5분위배율도 동 기간 4.636에서 4.492로 감소하였다.⁽⁸⁾ 둘째, 외환위기를 즈음해 소득양극화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지속된 기간 동안(1997년부터 1999년까지) 지니계수는 0.283에서 0.320으로 0.037만큼 악화되었고 5분위배율 또한 4.492에서 5.487로 무려 0.995만큼 악화되었다. 셋째, 이후 소득양극화는 점차 개선되는 추이였으나 2003년 이후 다시 악화되는 추이로 반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1999년 0.320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03년



註: 근로소득자 기준.

資料: 통계청.

〈그림 1〉 지니계수推移와 所得5分位倍率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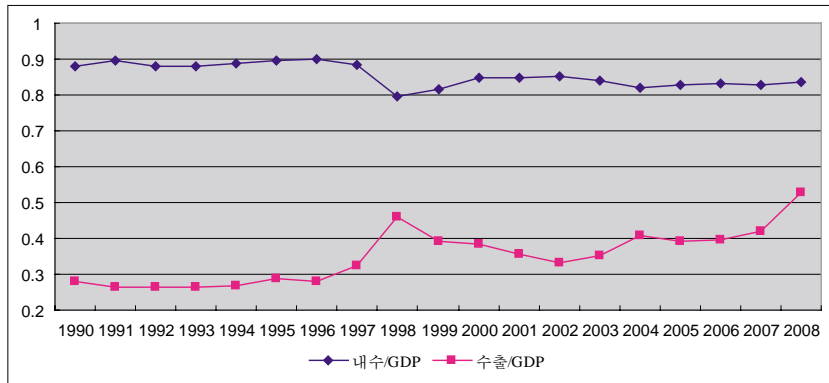
(7) 지니계수는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C. Gini)가 제시한 소득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0에서 1까지 숫자로 표시하는 지니계수는 가계 간의 소득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상정해 산출하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소득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평균을 소득 하위 20%의 평균으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표들이 소득양극화를 정확히 대변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양극화와 관련된 모든 논의에서 통념적으로 이들 지표들을 사용하므로 본 연구도 특별한 이견 없이 이들 지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관련된 논의는 민승규 외(2006)를 참조할 것.

(8) 1980년대부터의 추이를 보면 이러한 특징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0.306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최근까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5분위배율도 1999년 5.48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2년 5.181까지 하락했으나 이후에는 점차 다시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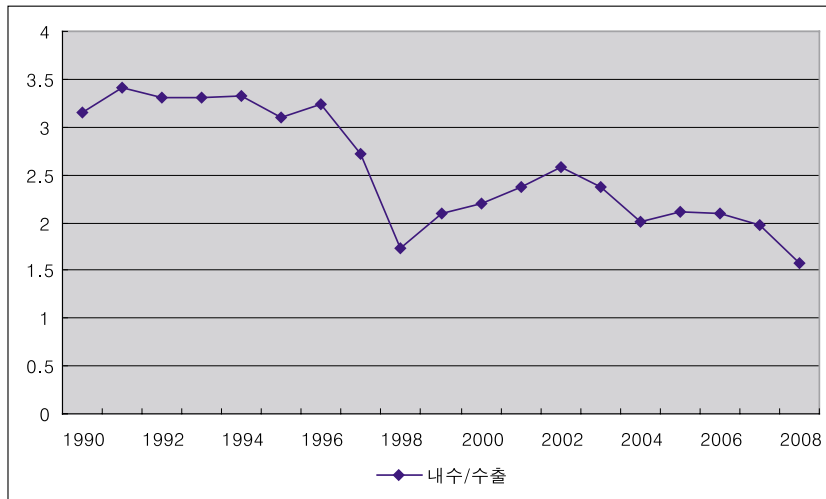
3.2. 産業兩極化

산업양극화는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IT산업과 비IT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해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수출산업 vs. 내수산업, 제조업 vs. 서비스업에 대한 자료만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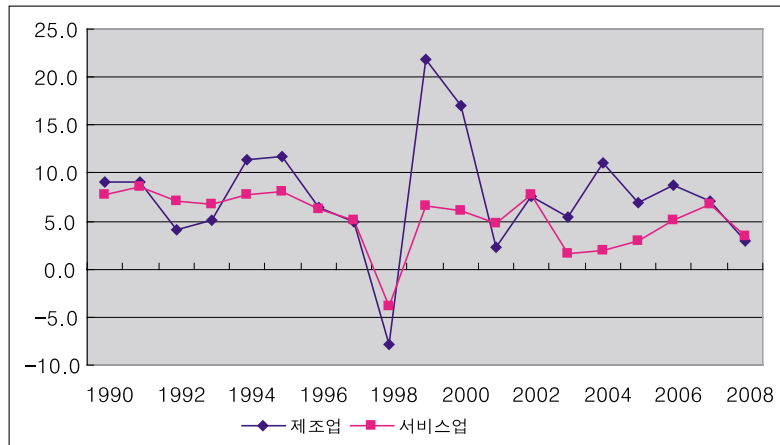


註: 내수=민간소비+총고정자본형성.

〈그림 2〉 輸出과 內需의 GDP 比重



〈그림 3〉 內需/輸出 比率



〈그림 4〉 製造業과 서비스업의 附加價值 生産增加率

〈그림 2〉는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⁹⁾ 여기 서도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 해 왔는데, 외환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조정기간을 겪기도 했다. 둘째, 내수비 중은 점차 감소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급감했으나 2002년 이후 다시 완만히 증가한 후 안정추세로 전환되었다. 셋째, 따라서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상대적인 비중(= 내수/수출)은 외환위기 이전에 일정 수준에 머물다가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급격히 하락했으나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참조 〈그림 3〉).

〈그림 4〉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이 후 외환위기 전까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제조업은 급성장한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성장해 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일시적으로 양자 간 성장률 격차가 해소되기도 했으나 2003년 이후 또다시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성장함으로써 격차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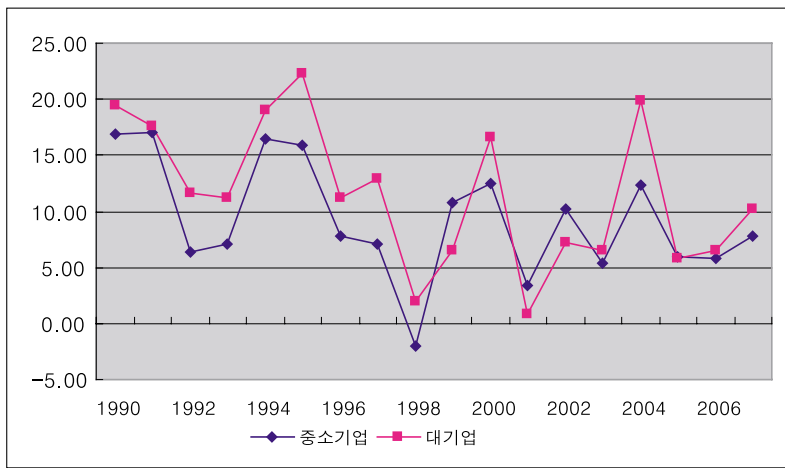
3.3. 企業兩極化

기업 간 격차를 비교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및 수익률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매출액의 상대적 변화는 대기업 과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나타내고, 수익률의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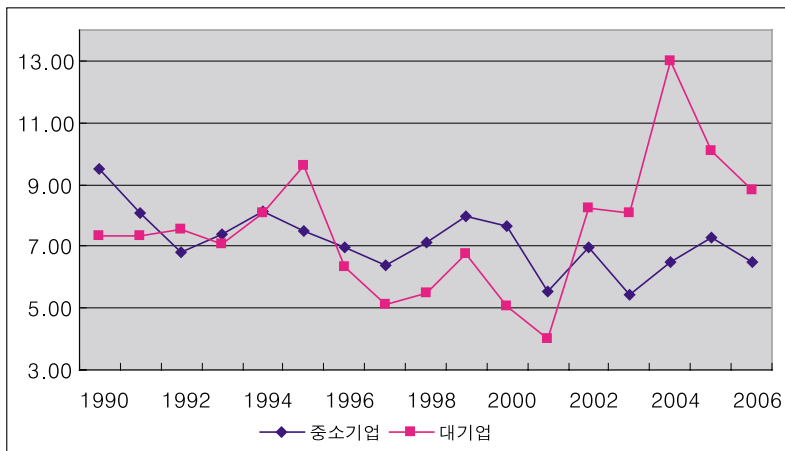
(9) 내수부문이란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을 합한 것임.

화는 양자 간 경제성과의 차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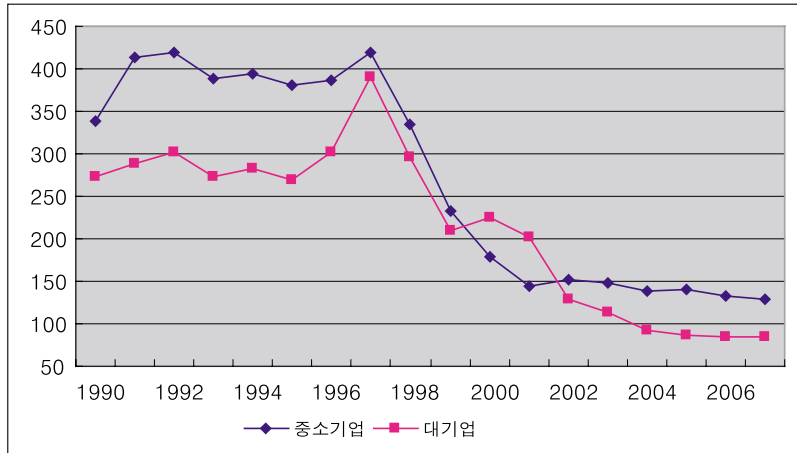
〈그림 5〉는 1990년대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대기업의 증가속도가 중소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의 추이는 어느 쪽이 더 빠르게 확대되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극히 최근에 와서는 또다시 대기업의 성장속도가 중소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기업 간의 양극화를 유발시킨 것처럼 보인다.



〈그림 5〉 賣出額 增加率(%)



〈그림 6〉 企業 經常利益率(%)



〈그림 7〉 負債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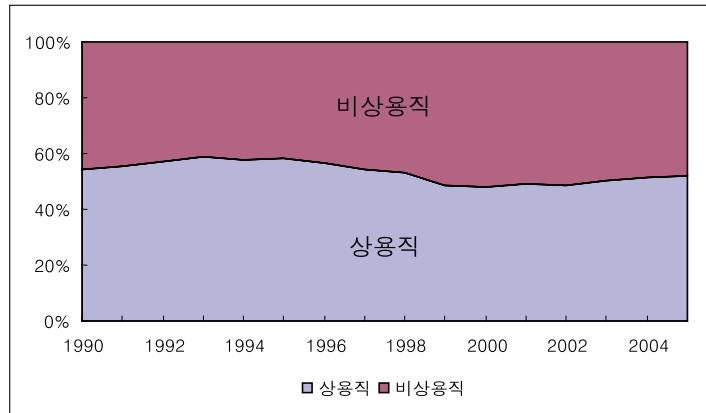
〈그림 6〉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상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성과면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특별한 격차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2001년까지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대기업에 비해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 이후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대기업에 비해 낮아졌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림 7〉의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이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황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두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양자 간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작은 부채비율을 보이기도 했으나 2002년 이후 다시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3.4. 雇傭兩極化

〈그림 8〉과 〈그림 9〉는 고용양극화와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8〉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비상용근로자의 비중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근로조건 등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노동부가 조사해오고 있는 자료를 이용한 〈그림 9〉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1년 26.8%, 2002년 27.4%에서 2003년에는 32.6%로 급증하고 있다. 2004년에도 37.0%로 급증하던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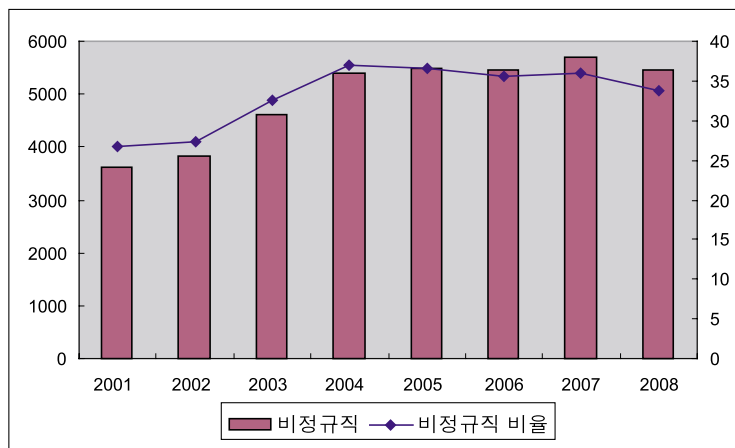
지금까지 소득, 산업, 기업 및 고용측면에서 양극화의 추이를 그림을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와 관련해 특징을 요약하자면, 1990년



註: 임금근로자 기준.

資料: 통계청.

〈그림 8〉 常傭職 vs. 非常傭職



註: 2001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근로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해옴.

資料: 노동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그림 9〉 非正規職 勤勞者 比重

대 이후 양극화는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던 양극화는 이후 다시 감소되는 추이를 보여 왔으나 최근에 들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최근의 양극화 심화현상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추이라기보다는 2003년 이후 악화된 현상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4. 兩極化의 原因: 世界化의 役割

4.1. 兩極化의 여러 原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의 원인은 크게 근본적 원인, 구조적 원인, 경기적 원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장동구(2004)].

根本的 原因

근본적 원인은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 과정에서 메가트렌드(mega-trend)를 좌우할만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의미한다. 여러 변화들 중 양극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世界化와 技術進歩를 들 수 있다.

제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계화는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내 양극화를 유발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경제가 무역자유화 및 금융자유화의 세계화 물결을 타고 발전해 오는 동안 시대에 따라 성장의 혜택을 누렸던 계층이 있는 반면 그에 따른 고통을 입었던 계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최근의 양극화와 관련해 세계화 추세가 우리나라의 양극화에 영향을 끼친 예로 중국의 부상과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점유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도 여러 모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우선 중국이 미국을 넘어 우리의 제1수출상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인 중화학공업, IT산업 등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 반면 농수산업, 경공업 등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사양산업화 하거나 정부의 지원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 간 소득격차, 도농 간 소득격차 등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입도 국내경제에서 양극화를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외국자본이 국내금융시장을 지배함에 따라 정책금융의 성격을 지닌 자금이 훨씬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과거보다는 어려워졌고 따라서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분야뿐만 아니라 유통분야에서도 외국자본의 유입이 유통시장의 대형화 현상을 불러와 양극화를 부추겼을 수 있다. 외국의 대형할인매장이 국내시장에 진입하면서 국내의 소규모 매점들이 몰락함에 따라 국내유통시장에 大益大·小益小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¹⁰⁾

(10) 몇 년 전 카르푸 및 월마트가 철수한 것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유통시장이 대형할인매장 위주로 변화된 배경에는 이들의 국내시장 진입이

기술발전 또한 승자와 패자를 유발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기술발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개인간, 기업간, 국가간 격차가 훨씬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의 가속화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숙련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반면 구기술의 가치를 잠식하여 비숙련노동자의 생산성을 낮춘다. 기술혁신에 대한 이러한 개인 간 적응력 격차는 신기술에 대한 학습기회의 차이, 학력의 차이, 선천적 재능의 차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여러 유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가져 기술혁신과 더불어 혜택을 받게 되지만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 기술혁신에 따라 고기술 보유자와 저기술 보유자 간에 양극화가 발생하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서 IT 관련 기술진보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과거의 단순한 기술진보와는 달리 최근의 기술발전은 훨씬 변화속도가 빨라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격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양극화 배경과 관련해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해 온 IT기술의 발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구조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IT 관련 산업은 급성장했으나 비IT산업은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양자 간의 격차, 그리고 이와 더불어 관련 산업 종사자들 간의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構造的 原因

세계화 및 기술진보와 같은 메가트렌드는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반적인 혜택이 국가경제 전체에 골고루 파급되지 못하고 일부 부문에 한정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滴下效果(trickle-down effect)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도록 경제구조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수출과 내수 간의 관계이다. 과거에는 수출이 증대하면 투자 및 고용이 증대되어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는 이러한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었다. <表 1>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수출이 증대하면 그에 상응해 내수가 확대되었는데, 최근에는 수출증가가 오히려 내수를 감소시키는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수출이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을 통해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 추세로 전환된 이유는 현재 우리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IT산업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IT산업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表 1〉 輸出-內需 關係의 變化(年平均 增加率)

	1970~1997	1998~2005	전 기간
수출증가율(%)	20.8	11.6	18.1
내수증가율(%)	6.7	-0.02	4.8
수출-내수 상관관계	0.98	-0.36	0.86

資料: 민승규 외(2006).

〈表 2〉 輸出의 內需 誘發效果

연도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유발계수	수출의 고용 유발효과(명/10억 원)
1995	0.70	46.3
2000	0.63	25.8
2005	0.62	15.7
2007	0.61	9.4

資料: 한국은행(2009).

경우 중간재 부품·소재의 수입의존도가 높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해 수출증대가 국내부가가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IT산업은 기술 및 자본집약도가 높아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낮으므로 IT산업 위주의 수출증대는 고용창출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수출증대가 투자 및 고용을 통해 국내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화되어 수출과 내수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적하효과와 감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갖춘 것은 사실이다. 대기업은 급속한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R&D 투자 등을 통해 자체 기술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함으로써 기술진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R&D 인력부족, 신용제한 등의 요인으로 기술개발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혁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투자에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 소요될 경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소요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워 투자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대기업에 더욱 뒤처지게 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반이 취약해 부품소재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함에 따라 수출부문의 증대에 따른 과실이 대기업에 머물고 중소기업에는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있어 양자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¹¹⁾ 또한 중소기업의 위축은 고용양극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중소기업은 취약한 경쟁력과 낮은 지불능력으로 인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되는데,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비정규직 비율이 19.3%에 불과한 반면 1-4인 사업체는 86.9%에 이르고 있다[노동부(2008)].

景氣的 原因

근본적 원인 혹은 구조적 원인은 장기적 양극화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는 반면, 경기적 원인은 최근에 심화된 양극화의 원인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경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양극화의 확대에는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가 악화되면 양극화가 심화되는 특징을 보여 왔는데[민승규 외(2006)], 최근 가계소비 및 투자의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해짐에 따라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수출주력산업(IT산업, 제조업 등)과 내수의존산업(비IT산업, 서비스업 등) 간의 양극화가 다시 심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계소비는 2003년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거의 제자리에 머물렀다. 2003년 2분기 이후 무려 6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소비가 감소했고 이후에도 일시 회복기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정체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2년 연평균 가계소비 증가율이 8.1%였고 외환위기의 충격이 포함된 1990년 이후 2002년까지의 기간에도 연평균 증가율이 5.97%였음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가계소비가 얼마나 심각하게 위축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가계소비가 위축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저금리정책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들 수 있다. 국민의 정부시절 벤처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비를 장려하고자 신용카드를 남발했는데,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발급하여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다. 한편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하락시켰다. 사상 최저수준의 금리까지 하락해 실질금리가 (-)에 이르자 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계대출이 과다하게 급증하였다. 정부의 배드뱅크 제도, 개인채무회생제도 등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수는 2007년 현재 아직도 266만 명에 이르고 있고⁽¹²⁾ 가계부채총액은 2008년 말 현재 688조 원으로서 가처분소득의 120%에 이르고 있다[박창균(2009)]. 신용불량자의 양산 및 과다한 가계부채는 가계

(11) 해외여행객수 및 여행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소비가 지지부진한 것도 고소득층의 경제적 성과가 저소득층의 소비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적하효과의 감소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12) 2007년 12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9월 말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266만 명에 신용불량정보 삭제자를 더하면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419만 명에 이른다.

〈表 3〉 最近의 家計消費 및 投資 推移(增加率 %)

연도	소비	투자
2001	5.5	0.3
2002	8.1	7.1
2003	0.5	4.4
2004	1.0	2.1
2005	4.6	1.9
2006	5.1	3.4
2007	5.1	4.2
2008	1.6	-1.7

註: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투자는 총고정자본 형성.

의 소비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부문도 경기침체와 더불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수부진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앞의 〈表 3〉에 따르면 2002년 7.1%의 증가율을 보였던 투자는 2003년 들어 4% 이하로 둔화되더니 2004년 후반부터는 거의 제자리에 머물다가 최근에는 심지어 감소되고 있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6.45%의 증가세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최근의 추이는 투자 또한 심각하게 위축되었음을 나타내준다.

최근 투자가 위축된 가장 큰 원인은 投資環境의 不確實性이다. 글로벌 위기, 전반적인 경기둔화, 반기업정서의 확대, 정부정책 방향의 불가측성 등 경제에 불확실성이 증대하게 되면 투자실패에 따라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지므로 기업들은 투자를 유보한 채 상황을 관망하게 되는 것이다[정운찬·김영식(2008), Dixit and Pindyck(1994)]. 실제적으로 기업들의 투자의향을 조사한 결과들도 투자가 부진한 이유로 높은 금리 혹은 자금사정보다는 투자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다.⁽¹³⁾ 이 외에도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보다는 가계대출 비중을 늘리고 또한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해 금융자금 운용을 단기화하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위한 장기자금 차입여건이 어려워진 것도 투자를 저해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2. 世界化의 役割

지금까지 본 것처럼 최근 악화된 양극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양한 원인 중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히 세계화가 주요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려면 최소한 다음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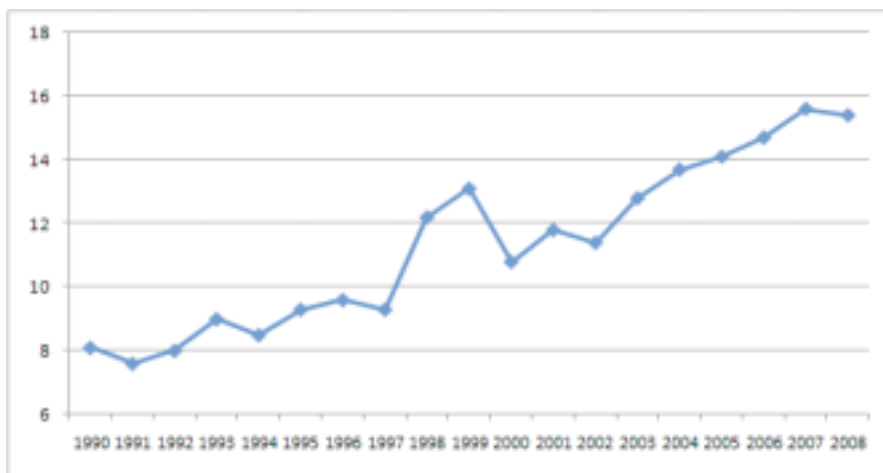
(13)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투자부진 이유로 정책불확실성 28%, 사업기회부재 22%, 자금조달애로 19%, 인력문제 15%, 기타 16%를 들고 있다.

같은 두 가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는 양극화가 최근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와 더불어 추세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혹시 양극화가 추세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근본적 요인인 기술진보보다 세계화가 훨씬 중요한 요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양극화가 추세적으로 지속되었는가? 앞의 <그림 1>-<그림 9>에서 보였듯이 현재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는 最近의 現像으로 보아야 한다. 이 현상이 단기적일지 장기적일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지만, 1990년대 이후의 추세에 비추어 보면 외환위기라는 충격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양극화가 완화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양극화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림 10>-<그림 11>은 이와 같은 최근의 양극화 현상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0>은 상대적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환위기로 인해 빈곤층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이후 점차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03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1>은 계층별 소득분포 변화 추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 그림도 최근의 양극화 현상이 상류층의 확대보다는 하류 및 빈곤층의 확대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양극화가 추세적으로 악화되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세계화 때문인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과 무역 및 금융측면에서의 세계화



資料: 통계청.

<그림 10> 相對的 貧困率



〈그림 11〉 1분위와 5분위의 所得占有率 推移

가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세계화의 영향은 기술혁신의 영향과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양극화가 진행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은 이를 세계화 때문이라고 결론짓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근본적인 요인 중 어느 요인이 더 중요한가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세계화보다는 技術進歩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결론을 짓고 있다.

Esquivel and Rodriguez-Lopez(2003)와 Hanson and Harrison(1999)은 최근의 소득양극화 심화현상은 무역자유화 진전보다는 범세계적으로 기술 및 산업구조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승자에 대한 보상이 커지고, 통신 및 IT 등 고기술 인력의 수요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NAFTA 회원국 내 숙련-비숙련 임금격차의 확대는 NAF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었고, NAFTA 체결 자체가 임금격차 확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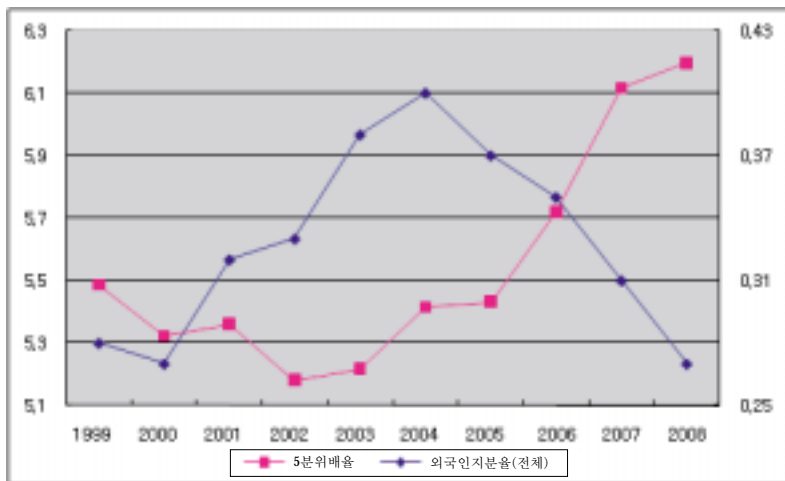
Cline(1999)은 미국 내 임금격차 자료를 이용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요인과 확대시키는 요인이 공존하는데,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이 더 크게 나타나 1973년부터 1993년까지 임금격차가 18% 확대되었다. 확대요인으로는 무역, 이민, 최저임금하락, 탈노조화, 기술진보 등이 있는데, 양극화에 대한 무역의 영향은 기술진보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

〈表 4〉 所得隔差 擴大 要因(%)

요인	축소요인	확대요인							합계
	숙련노동 공급증가	무역	이민	최저임금 하락	탈노조화	기술진보	기타	소 합계	
비율	-40	7	2	5	3	29	29	97	18

註: 합계는 단순합이 아니라 $(1-0.4) \times (1+0.97)=1.18$ 방법으로 계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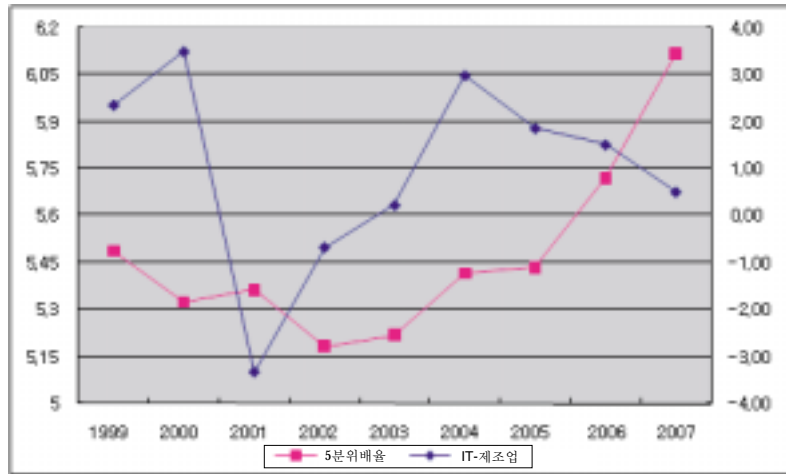
資料: Cline(1999).



〈그림 12〉 外國人持分率과 兩極化 關係

IT의 발달 등이 세계화의 추세를 타고 확산되었기 때문이지 세계화 자체가 그 주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차문중(2006), 현정택(2006)].

이처럼 세계화보다는 기술진보가 양극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세계화를 대변해주는 주식시장의 외국인지분율과 5분위배율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외국인지분율은 증가 후 감소하고 있는데 5분위배율은 처음에는 감소하다고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 양자 간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상관계수도 음(-)으로 나타난다. 한편 〈그림 13〉은 동기간 IT산업과 제조업 간의 영업이익률 격차와 5분위배율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IT산업은 현재 우리나라 기술진보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므로 전체 제조업과의 격차는 기술격차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을 나타내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그림에 따르면 기술격차와 5분위배율 간에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註: IT-제조업 격차는 매출액영업이익률 격차를 의미.

〈그림 13〉 IT-製造業 隔差와 兩極化 關係

것으로 보이며, 양자 간의 상관계수도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양극화 현상도 세계화보다는 기술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 兩極化 解消方案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양극화의 현실 및 양극화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극화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 처방을 내려야지 양극화가 나타난 현상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소득양극화가 나타났으므로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저소득층에 나누어준다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나타났으니 대기업을 억제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한다든지 하는 식의 처방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만일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연장한다면, IT산업과 비IT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니 IT산업을 억제하고 비IT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출과 내수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니 수출을 억제하고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처방은 황당하게 들릴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에 대한 처방은 위에서 제시한 양극화 原因에 대한 처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적 원인에 대한 처방에서 시작해, 구조적 원인에 대한 처방 그리고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처로 전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1. 景氣活性化: 景氣의 原因 解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근 갑자기 악화된 양극화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한 경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내수가 지지부진한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과거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가 활성화될 때 양극화가 완화된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최근 경기둔화와 더불어 확대된 양극화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景氣活性化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투자와 창업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제반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반기업정서와 이에 편승한 정책남발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투자뿐만 아니라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의 소비위축은 카드문제, 과다부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고갈, 미래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 경제심리가 불안정해져 발생한 측면도 크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문제 및 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소해 소비위축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쓸데없는 반목을 종식시키고 경제심리를 안정시켜 소비를 진작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2. 滴下效果 增大: 構造的 原因 解消

일시적인 경기적 원인이 제거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더라도 기술혁신이 심화되면 양극화가 악화될 우려는 상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도부문의 과실이 경제 전 분야 및 전 계층에 파급되는 적하효과가 커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적하효과는 일단 경제적 성과를 창출해내는 선도부문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적하효과의 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도부문은 알아서 세계화 및 기술진보와 같은 메가트렌드(mega-trend)를 타도록 놓아둘 필요가 있다. 과거와는 달리 정부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이 대내외적 변화를 더 잘 감지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선도부문을 저지하거나 적대시하는 방식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선도부문의 성과가 골고루 파급되도록 적하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부문 간 聯關關係가 강화되어야 한다. 즉, 수출성과가 내수로 연계되고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

기업의 성장을 유발하고 IT산업의 발전이 비IT산업의 성과를 제고시키며 제조업의 성장 이 곧 서비스업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증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을 근간으로 한 부품소재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과 연계성이 높은 비즈니스서비스산업, 고임금 일자리를 보장하는 지식집약분야의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한다[김인호(2005), 나라경제(2006), 하준경(2004)].

그런데 적�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제 부문 간 연관관계를 강화시키는 것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부문 간, 계층 간 移動性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도부문과 낙후부문이 고착화되지 않고 이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불공정한 진입장벽들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기술격차라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문의 잉여노동력이 기술을 습득해 노동수요가 증대된 선도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시킴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상 인적자원 육성 및 능력개발이 불가능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빈곤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할 때도 단순히 현재의 빈곤을 일부 해소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들이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사회적 계층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빈곤의 대물림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5.3. 世界化 積極的 對處

세계화 및 기술진보와 같은 메가트렌드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은 상존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전략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에서는 반세계화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런 주장은 기술발전 억제가 양극화 해결책이라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한편 대부분의 논자들은 세계화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자세보다는 세계화가 선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rueger(2006)].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세계화의 수혜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즉, 세계화는 전 세계 국가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하는데 세계화의 파고를 탄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간 양극화에서 상위국가로 진전해 왔는가 아니면 하위국가로 퇴보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 설명한 대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는 무역 및 금융거래의 자유화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세계

화에 부응하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여러 자유화 정책기조를 확대해 왔다. 그 결과 GDP는 1953년 13억 달러에서 2007년 9,698억 달러(14위)로, 1인당소득은 1953년 67달러에서 2007년 19,730달러(48위)로 증가했다.⁽¹⁴⁾ 아울러 수출도 1952년 0.28억 달러에서 2004년 4,220억 달러로 거의 1만 5천 배나 급증했다.

이러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와 다른 기조를 취해왔던 국가들과 비교해보자. 1975년 우리나라의 1인당소득은 594달러(76위)였는데,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았던 북한의 경우 1인당소득은 1975년 578달러(78위)에서 2008년 1,700달러(189위, PPP기준)로 최빈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2007년 GDP는 400억 달러(94위, PPP기준), 수출은 16.7억 달러(136위)로서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북한의 경우 폐쇄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를 택해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개방정책을 회피한 또 다른 사례로 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1975년 남미 국가들의 1인당소득 순위는 베네수엘라 35위, 아르헨티나 43위, 멕시코 47위, 브라질 62위, 페루 63위, 니카라과 71위, 칠레 72위, 에콰도르 75위 등으로 우리보다 앞서 있거나 유사했었다. 또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도 가이아나 73위, 스와질랜드 77위, 코트디부와르 79위 등으로 우리와 유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이들의 1인당소득은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100위권 밖에 있어 상대적으로 훨씬 퇴보했다.

물론 이러한 증거는 세계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커다란 혜택을 보았더라도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내에서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승자와 패자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승자의 혜택이 국가 내에서 패자에서 파급될 수 있도록 부문 간 연계효과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적화효과가 약화된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경제구조를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인적자원 형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문 간 이동이 불가능한 저숙련노동자 혹은 기타 사회약자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이들을 위해 社會福祉 政策을 제공하는 것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14) PPP기준으로는 2008년 26,000달러로서 세계 51위를 차지하고 있다.

〈表 5〉 1人當 所得 世界順位 變化

국가	연도	1975	2008
베네수엘라		35	82
아르헨티나		43	80
멕시코		47	81
브라질		62	101
페루		63	1,115
니카라과		71	165
칠레		72	76
에콰도르		75	120
가이아나		73	154
스와질랜드		77	136
코트디부와르		79	188
북한		78	189
대한민국		76	51

註: 2008년은 PPP 기준임.

資料: 김인준·이영섭(2008); CIA(2009).

6. 結 論

지금까지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거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현황, 원인 및 대응방안을 세계화와 관련해 살펴보았다.

여러 측면에서 판단해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심화현상은 추세적인 것이 아니며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개선되어 오던 양극화 문제가 2003년 이후 다시 악화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따라서 최근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 전반 혹은 세계화 추이 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현황과 어긋나는 논의를 할 우려가 있다. 현황과 관련해 또 하나 주시할 특징은 최근의 양극화 심화현상이 상류층의 비중은 대체적으로 변함이 없는데 貧困層이 확대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최근의 양극화 현상은 景氣的 原因에 기인한 바가 가장 크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가 악화되면 양극화도 심화되는 추이를 보여 왔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소비위축, 투자부진 등의 내수부진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경기침체에 취약한 부문 그리고 내수부진에 취약한 부문이 타격을 많이 입었고 이에 따

라 현재와 같은 특징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구조적 원인도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 예를 들어 수출부문 혹은 IT산업과 같은 기술선도부문은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선도부문의 성과가 낙후된 부문에 제대로 파급되지 않는 경제구조는 양극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 간 연결고리, 산업간 연관관계, 산출과 고용 간 연결고리 등이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부문의 성과가 사회전체에 골고루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와 기술진보 등의 근본적 원인은 현재의 양극화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근본적 원인들은 양극화의 장기적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의 현상은 단기적인 특징이 더 크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양극화에는 세계화 요인보다는 技術進歩 要因이 더 큰 영향을 미쳐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극화에 대한 처방도 양극화의 원인과 결부지어 제시해야 한다. 세계화와 기술진보 같은 근본적 원인과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메가트렌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엄청난 수혜자였다. 물론 전체적으로 커다란 혜택을 보았더라도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내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승자와 패자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 내에서 승자의 혜택이 패자에서 파급되는 적하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부문 간 연계효과를 높여야 한다. 적하효과가 약화된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경제구조를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인적자원 형성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淑明女子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길 52

전화: (02)710-9530

팩스: (02)2077-7328

E-mail: yrshee@sookmyung.ac.kr

參 考 文 獻

강석훈(2006): “양극화의 오해와 남용: 소득 양극화를 중심으로,” 미발표자료.

- 김인준·이영섭(2008): 『국제경제론』, 제5판, 다산출판사.
- 김인호(2005): “경제양극화 문제: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해결노력이 필요한가,” 미래경제 포럼 강연자료.
- 김준현(2005): 경제적 세계화와 빈곤문제, 담론 7(2).
- 나라경제(2006): 특집: 양극화 현상 심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노동부(2008): 『경제활동 부가조사 결과』.
- 민승규·이갑수·김근영·손민중(2006):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547.
- 박창균(2009):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계신용 증가현상에 대한 평가,” 한국경제의 분석 패널 회의.
- 이강국(2004):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프레시안.
- 이노방(2005): “사회양극화의 주범은 누구인가: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운동진영의 과제,” 사회진보연대.
- 이정우(2005): “경제양극화와 한국의 미래: 사회통합의 길,” 대화문화아카데미 토론회.
- 이준구·이창용(2005): 『경제학원론』, 제3판, 법문사.
- 장동구(2004): “경제양극화의 현상 및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경제학회 경제정책포럼 발표자료.
- 장상환(2005): “신자유주의 시대의 빈곤문제,” 『내일을 여는 역사』, 겨울호.
- 정운찬·김영식(2008): 『거시경제론』, 울곡출판사.
- 차문중(2006): “한·미 FTA 체결이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KDI.
-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 하준경(2004): “경제양극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한국은행(2009):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 현정택(2006): “양극화 심화 주범은 세계화 그 자체가 아니다,” 재정경제부 한미 FTA 특별기획.
- 황준성(2003): “세계화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의 모색: 정치경제학적 접근,” 한국경상학회, 『경상논총』, 28, 71-194.
- Atkinson, A. B.(1999): “Is Rising Inequality Inevitable? A Critique of the Transatlantic Consensus,” UN University, *WIDER Lecture*, 3.
- CIA(2009): *World Factbook*.
- Cline, W.(1999): “Trade and Income Distribution: The Debate and New Evidence,” *IIE Policy Brief*,

99-7.

- Dixit, A., and R. Pindyck(1994): *Investment under Uncertainty*, Princeton University.
- Economist(2001): “Survey: Globalisation,” Sep. 27th.
- _____ (2005): “Survey: Microfinance,” Nov. 5th.
- Esquivel, G., and J. A. Rodriguez-Lopez(2003): “Technology, Trade, and Wage Inequality in Mexico before and after NAFT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2**, 543-565.
- Fisher, S.(2003): “Globalization and Its Challenges,” *American Economic Review*, **93**, **2**, 1-30.
- Hanson, G., and A. Harrison(1999): “Trade Liberalization and Wage Inequality in Mexico,”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2**, **2**.
- Hurrel, A., and N. Woods(2000):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in R. Higgot(ed.),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Globalization*, Edward Elgar.
- Krueger, A.(2006): “The World Economy at the Start of the 2st Century,” IMF.
- Lindert, P. H., and J. Williamson(2001): “Does Globalization Make the World More Unequal?” NBER Working Paper **8228**.
- Sala-i-Martin, X.(2002): “The Disturbing Rise of Global Income Inequality,” NBER Working Paper **8933**.
- Srinivasan, T. N., and J. Bhagwati(1999): “Outward-orientation and Development: Are Revisionists Right?” Yale University, Economic Growth Center Discussion Paper **806**.
- Stiglitz, J. E.(2003):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W.W. Norton and Company.
- Wade, R. H.(2001): “The Rising Inequality of World Income Distribution,” *Finance and Development*, **38**, **4**.
- Wan, G., M. Lu, and Z. Chen(2004): “Globalization and Regional Income Inequality,” UN University, WIDER Discussion Paper **2004/10**.